

“추경은 안돼”... 다시 돌아선 與野



그저 먼 곳만...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왼쪽부터) 등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을 위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회담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추경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로 결렬됐다. /연합뉴스

원내대표 회동 합의 실패... 조국 출석 놓고도 이견 정부조직법 심사 등 제동... 우원식 “野 대선 불복”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강경외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합의문에 추경 문제를 넣는 것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야당은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결렬에도 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는 정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완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회동은 1시간도 안 돼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문제는 역시 ‘추경’이었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을 두고 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야에 빼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다(한국당은)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 않고 내일 모레면 관동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7월 국회에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

위에 출석하는 것도 쟁점이 됐다. 합의문에 조국 수석 출석문제를 포함하기 어려우면 구두로 약속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정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앞서 여야는 애초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7월 중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문 채택에 실패하면서 정부조직법 심사 문제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애초 정부조직법은 23일부터 심의하는 것을 잠정 합의했으나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회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할까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회 특위 처리 문제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사법제도, 4차산업, 미세먼지 특위 등을 설치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추미에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야권이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민생을 외면하고 실업의 고통을 외면하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하신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경 심사도 아니고 논의도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대선 불복이다”고 말한 뒤,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야당 정책위의장이 이미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을 같이 했다”며 “이를 두고 대선 불복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것은 민주당에서 추경을 계속 논의해야 하는데 동의가 안 되면 다른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사청문회 28일 세번째 ‘슈퍼 수요일’

26일~내달 3일 후보자 8명 줄줄이 청문회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상 진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8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회를 준비 중인 인사는 김상곤(교육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 김은경(환경부), 송영무(국방부), 유영민(미래창조과학부), 정현백(여성가족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조명균(통일부) 후보자 등 8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달 26~30일 사이에 청문회를 거친다. 특히 주 중반인 28일에는 적어도 3건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려 세 번째 ‘슈퍼 수요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3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위원회는 한승회 국세청장의 청문회를 오는 26일, 외교교통위원회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는 29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하고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등 11명의 증인을 확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오는 28일,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30일 각각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인사청문회 재개를 앞두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 등 3명의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이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문제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방산비리 문제에 연루돼 있다”며 “인사청문회 전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국민 인내심이나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 하려 하지 말고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 와중에... 돈줄만 챙긴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폐속 통과... 중앙당 年 50억원 모금 가능

정당 중앙당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33명이 찬성 6명 반대, 16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정당의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린다는 데 의

미가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됐다. 국회는 또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24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이 결의안은 의장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남북의 8·15 이산가족 상봉 추진 촉구 ▲이산가족 생사 확인 과 사신 교환 등 상봉 정례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예산 반영 다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민주당과 통합 절대 불가”

“국민의당 견제로 정부가 호남 배려... 洪 흡수론 뺄 맛을 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민의당이 없어지거나 (더불어민주당에) 통합돼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배려의 가치를 철저히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국민의당이 정부 견제와 비판을 하므로 문 대통령이 호남을 배려하고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대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이 국민의당에 ‘여당 2중대’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야당들이 꿈에서 깨지를 못했다. 여당이 120석밖에 안 돼 야당이 견제·비판 명분으로 협조를 안 하면 국회와 정부가 돌아가지 않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관영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국회 운영위원장·정보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야당에 요구하는 데 대해서 “작년 원 구성 당시 3당 합의에도 반한다. 자기를 입장만 생각해 이뤄질 수 없는 공염불을 하니 파장만 생긴다”고 비판했다. 다만, “내년에 2기 원 구성 협상을 할 때는 해를 만 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자유한국당 당권후보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막말에도 금도가 있는데 넘어섰다. 국민의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홍 지사가 뺄 맛을 갖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통합의 ‘트’자도 얘기해본 일이 없다. 해서는 안 되고, 절

김동철 “다당제 효과로 국정 정상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엄중히 인식하지만,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정상화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했지만 국민의당의 협조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과거처럼

적대적인 양당 구조로 운영됐다면서 긴게임식 버티기로 파행이 장기화하고 정국 경색의 해법과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려줘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효과다. 다당제는 이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